

보도시점 2025. 1. 23.(목) 배포 즉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중 현장 누비며 청산 활동에 혼신의 노력

-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3주간(1.6.~1.24.)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막바지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기관장(청장·지청장)이 직접 건설현장 등 체불이 발생한 현장을 찾아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체불임금을 신속히 청산하고 있으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❶ 대전청장(김도형)은 1.17. 체불이 발생한 관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원·하청 현장 소장 등 관계자를 면담하고, 근로자 8명의 퇴직금 4,000만 원을 설 명절 전에 청산토록 강력히 지도한 결과, 당일 전액이 청산되었다.
- ❷ 중부청 성남지청장(양승준)은 1.9. 57명의 임금 1억 2천여만 원을 체불한 제조업체 대표를 직접 면담하고, 청산 지도하여 1.14. 체불임금 전액이 지급되었다.
- ❸ 부산청 진주지청장(직무대리 문성호)은 1.17. 설 명절 ‘체불신고 전담창구’를 통해 집단 체불 신고가 접수된 관내 병원을 찾아 51명의 임금 8,900만 원이 체불된 사실을 확인했고, 조속한 청산을 지도한 결과 현장에서 즉시 2,500만 원이 청산되도록 했고, 남은 체불임금도 1.20. 전액 청산되었다.

이러한 기관장 중심의 현장 청산 활동과 더불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엄정한 법 집행도 이어지고 있다.

- ❶ 광주청 전주지청(지청장 황정호)은 경영 부실을 자초하고 근로자 1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급 합계 약 40여억 원을 체불한 자동차 알루미늄 휠 제조업체 대표에 대해 1.13.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❷ 대구청 대구서부지청(지청장 김성호)은 120만 원을 체불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한 설비업체 대표에 대해 1.16.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그 결과 체불사업주는 영장 집행 직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체불임금 전액을 곧바로 지급했다.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설 명절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남은 집중 지도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임금체불 청산에 집중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7553)
		담당자	사무관	이강욱 (044-202-7521)
			주무관	현원규 (044-202-7550)
			주무관	이경수 (044-202-7538)

